

# 여성정책 국내동향

Vol. 39 2018. 08.16.~08.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현안



###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2018년보다 37.4% 늘어난 1조 496억 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정부지원 대상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확대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8.27.

## 주요 내용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13만원	→	월 20만원
 지원연령 상향	만14세미만	→	만 18세미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18만원	→	월 35만
 아이돌봄 지원 대상확대(중위소득기준)	120% 이하	→	150%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113개소	→	218개소

####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 확대	492명	→	626명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 확대 배치	86명	→	125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	16명	→	26명
 가정폭력·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1인당 5백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	103개소/348명	→	128개소/572명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신설		→	5개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	신규 운영

#### 성차별 구조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 사업 운영	→	4개 권역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	표준화 및 질 제고 추진
 대중매체 모니터링 확대	→	20회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	→	43개소

12회  
15개소

##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역대 최저

- 2017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 감소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8.08.22.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개선 추진

- 지난 2017년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법령·사업 등 3만4천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8천여 건의 개선계획을 수립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8.20.

## 평화를 위한 기억,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기념식 개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8.13.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08.14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과다 또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5인)	08.14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08.27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08.28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둌으로써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08.28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건강·복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08.14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2인)	08.14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08.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도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08.2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젠더 폭력 ·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08.2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08.23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 삭제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08.24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08.27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08.27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08.28	증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08.28	가정폭력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제도 도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08.28	현행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홍행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08.28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 도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08.28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강화

## 유관기관 연구 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향후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하여 설계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18.08.13